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화학정책자금 뒷거래 의혹”

정부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공적자금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을 둘러싸고 무수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공적자금은 당초의 조성규모를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올바로 쓰여졌는지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고, 정책지원자금은 지원규모는 공적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편법지원 가능성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결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관료 아니 모든 공무원들이 구구절절이 썩어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벤처게이트」가 불거져 나오기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최근들어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의 최선봉에 섰던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벤처게이트」에 연류돼 있는 상태에서 관련부처 공무원들이야 오죽할까 생각하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말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은 1998년 64조원이었지만 금융구조조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은 모두 109조원으로 예상액의 2배에 육박했고, 2000년 가을에 40조원 이상이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49조가 넘는다.

정부가 1998년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때부터 경제계 및 학계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방만한 운용을 걱정했었다. 조성과정에서 합리적인 예측이 부족했고 철저한 손실분담원칙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8년 정부가 추정한 금융권 부실규모는 118조원으로 64조원이면 처리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1998년 이후 2년간 총 92조원의 금융권 부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말 금융권 부실규모가 66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잠재부실이 상존해 있어 부실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공적자금 집행과정에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되고 있다. 손실분담원칙 확립, 비용최소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 3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대상기관이 아닌 투자신탁회사와 국책은행에 편법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됐는가 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 경영진이나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도 거의 없었다. 예금보호 대상기관이 아닌 한남투신과 신세기투신에도 예금을 사실상 보장해주었을 정도이다. 정부부처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은 당연하다 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는 8월말 현재 총 투입자금 59조원 중 7조5000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고, 금융감독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점검하고 있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또다시 공적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유착관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을 정도이다.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 기업주와 관계공무원 또는 정치권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은 국민 일반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부실기업주, 은행 경영진 및 종사자, 부실금융기관 예금자를 보상 또는 보호해주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변질됐고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과 종사자, 부실 기업주, 부실 금융기관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

공적자금에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화학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IMF 위기이후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지원된 실업구제자금에서부터 화학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한답시고 지원하는 생물산업 육성자금이나 벤처기업 창업보육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화학산업 D/B 구축자금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백-수천억원이 지원됐지만 성과는 오리무중이고 국민의 혈세만 공중분해된 꼴이 되고 있다.

화학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자금이 재벌단체에 지원되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벤처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일부에서 지원자금의 20-30%가 커미션으로 관계공무원 또는 브로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2001년에도 수백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얼마를 더 퍼부어야 「흡혈귀」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이나 화학산업 관련 정책자금 모두 투명한관리시스템과함께지원자금의사용처를명명백백히밝혀내고부정에대해서는철저한책임규명이이뤄져야할것이다.

<화학저널 2000/11/20>